

<기재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

1. 2012년 업무계획은 MB정부의 업적을 마감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에 2013년 업무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출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12년 업무계획은 MB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1) 위기를 극복하고(“복합위험 극복”), 2) 서민을 따뜻하게 돌보고(“서민생활 안정”), 3) 성장기반을 강화(“지속성장 기반 공고화”)로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반면에 2013년 업무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위주로 핵심과제를 구성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과제를 제외하면 2011년 업무계획과 유사함.

o 일자리 창출과 경제안정은 거의 매년 주요과제로 다루어져 왔음. 여기에 신정부의 국정과제 “재원확보”가 추가된 구조.

<표 1> 2011~'13년 업무계획 주요 정책과제 비교

2013년	2012년	2011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추진계획”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	“활기찬 경제, 성숙한 시장”을 위한 전략
1. 일자리 창출 2. 민생 및 경제안정 3.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1. 복합위험 극복 2. 서민생활 안정 3. 지속성장기반 공고화	1. 일자리 창출과 견고한 성장 2.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지원 3. 경제체질 개선과 건전성 제고 4. G20 후속조치와 글로벌리더십 강화 5. 공공부문 공정성 제고

2. 장기 Vison 부재

-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이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단기적 경기대응정책에 주력.
 - o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성장률 추세적 하락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나 정책과제로는 선택하지 않았음.
- 경제 전반에 저성장 심리가 정착되고 있는 반면에 “성장 의욕”을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Vision을 제시하려는 정책을 보이지 않고 있음.
 - o 2013년은 “박근혜 정부”의 초년도이므로 5년을 내다보고 장기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나, 장기정책이 없음.
- 매년의 업무계획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가한 수동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추진 점검과제」
 - o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 지표가 개선 추세를 보이면서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회복국면에 본격 진입이 녹록치 않은 상황
 - ➔ 이에 대응하여 금년 하반기가 경제회복을 체감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경주 “

<표 2> 기재부 경제운용 목표

	2012	2013			2014
		'12. 9월	'13. 3	'13. 5	
경제성장률	2.0	4.0	2.3	2.7	4.0
취업자 증가(만명)	44	40	25	30	48
고용률(%)	64.2	-	64.6	64.7	65.6

- 기재부의 입장은 수출 등 경제여건의 호전을 모멘텀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하반기에 3% 중반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2014년 세계 경제의 호전에 따라 4%의 잠재성장률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해석됨.
 - o 미국 연방은행의 QE 정책 변화 우려에 따른 세계금융시장의 충격이 이미 개도국으로부터 자금이탈 양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 등 개도국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어 2011년 9월 유럽위기 발발에 이어 2013년 하반기는 개도국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 MB정부가 위기대응에 정책노력을 다 쏟은 결과로 성장기반 강화과제를 포기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박근혜 정부”가 반복해서는 안됨.
 - o 2014~ '17년간 한국 경제가 4%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조건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Q. 세계경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 성장국면에 진입할 것인가?
 - Q. 한국 경제는 자구적 별도의 노력 없이도 4%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 o 현재 기재부는 상기한 두 가지 불확실성에 대하여 공히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o 만약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아져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거나, 내수가 호전되지 못하여 4% 성장률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 o 이 “박근혜 정부”가 성패를 좌우하는 정권 차원의 위협에 대하여 기재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현재 기재부의 입장은 이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4. 거시경제 하방위험 외면한 숫자 맞추기 재정운영계획 및 공약가계부

- 10월 국회에 제출될 「2013~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이 이상과

같은 낙관적 거시경제 여건을 전제로 짜여 질 경우, “박근혜 정부” 는 집권 후반부에 심각한 재정위기를 직면할 위험이 있음.

○ 2013년 세수예산은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216.4조원을 편성했으나, 기재부가 계획한 2.7%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상당한 세수 차질이 불가피.

* 1~5월 작년 동기대비 내국세수 9조원 감소, 세수진도비율은 작년 5월 47.4%에서 금년 5월 41.3%로 부진함.

○ 추경(5월 17일) 17.3조원 중 12조원 예산 부족분 충당, 이중 세수 부족 충당 6조원,

○ 금년 세수 최소 15조원~ 최대 20조원 예상, 이중 추경 반영분 6조원을 제외하면 세수 부족 문제는 9조원~14조원,

○ 내년에도 금년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수 부진이 불가피, ‘14년부터 4%이상의 성장을 실현해야 재정계획과 공약가계부 실현 가능.

- 집권 후반부에 지출이 집중된 공약가계부, 재정난으로 추진에로 우려

○ 중기재정운영계획의 GDP 성장률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

○ ‘12~’ 16년 중기재정운영계획 총지출에 공약가계부 추가 부담

○ 기업 수지 악화로 법인세 등 세수 감소 심각

○ 집권 후반부(‘15~’ 17년)에 공약사업 소요지출의 84%, 세수 확충의 78.7%, 세출 절감의 83.1%가 편중되어 있어 계획이행의 책임성이 미약한 숫자 맞추기가 될 가능성 높음.

5.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기재부 업무계획에는 창조경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없는 대신에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을 국정과제 사업으로 제시.

○ 서비스 산업육성정책은 “창조경제” 와 무관하게 2012년 업무계획에서 “경제체질 선진화” 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를 정책과제로 내걸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 (2012. 7.20)

- 2013년 업무계획에서는 2012년의 “서비스선진화”에 “창조형”이란 수식어를 붙여 창조경제 구현정책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6. 일자리 창출 정책

- 2012년 업무계획에는 “고용창출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다수 제시되었으나, 2013년 업무계획에서는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운용방식을 개편”하는 등 정책 방향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정책 과제 제시는 빈약함.

2013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선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세액공제제도 제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적용대상 서비스업종 범위 확대 - 고용창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보험공사 보증한도 확대(2배) ○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입은행, 대출금리 및 한도 우대

7. 성과 평가와 권고

- 2012년 업무계획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빈약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하였음.
- MB정부에서 개발된 정책들의 연속성 여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간의 관계가 정리될 필요 있음.
 -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부는 영속하는 만큼, 지난 정부의 정책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필요.

- 기재부 자체 평가(“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반기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 대부분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중”
 - o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3.28일)의 72개 정책과제
 - 추진 완료: 31개
 - 정상추진: 34개,
 - 지연: 7개(입법 조치, 협의 지연 및 일정 조정)
 - o <주요 대책>
 -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4.1일)
 -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 「수출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5.1일)
 -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 방안」(5.15일)
 - 「고용률 70% 로드맵」(6.4일),
 - 「창조경제 실현계획」(6.5일)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27일)
 - 「2013년 세법개정안」(8월 8일)

- 기재부에 따르면, 모든 정책이 대부분 잘 추진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있음.
 - o 대표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음.
 - o 2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 의문: 기재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
구하고 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변
화가 없는가? 정책효과를 내는 것은 시간의 문제인가?

- 국정과제 이행에 대하여 기재부가 책임 있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필요함.
 - o 새 정부 초기에는 국정과제 이행에 역점이 두어지나 시간이 갈수록 국정과제 이행보다 재정 제약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 ☞ 정권 초기에는 국정과제 이행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계획이 실현 가능성보다 일단 “숫자 맞추기” 계획이 될 위험이 높음.
 - ☞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정부도 정권과 함께 책임진다는 높은 “주인의식” 을 가지고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함.
 - o 2013년 세법 개정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하게 된 본질을 기재부는 주목할 필요 있음.
 - ☞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 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설득할 수 없음.

-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에 대응하는 재정계획과 저성장기조 탈피를 도모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공약사업의 재정부담을 분산하고 경기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연도 조정이 필요.

〈표1: 연도별 주요 업무계획 비교〉

2013년	2012년	2011년
<p><1. 일자리 창출> 가. 경제활력회복 나.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국정과제) 다.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마. 협동조합 활성화(국정과제)</p>	<p><1분야: 복합 위험 극복> 1. 유럽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 (1)비상대응체제 운용 (2)취약요인 보안(재정부문, 가계기업금융부문, 외환 부문) (3)경기둔화대응(선제적 재정운용, 내수활성화, 투자활성화) 2. 원자재 가격 충격 완화 3. 선거 리스크 최소화</p>	<p><1. 튼튼한 거시경제: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1) 거시경제 안정 (2) 경제 체질 개선 (3) 물가 및 부동산시장</p>
<p><2. 민생 및 경제안정> 가.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국정과제) 나. 가계부담 경감 다. 대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국정과제) 라.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국정과제) 마.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국정과제)</p>	<p><2분야: 서민생활 안정> 1. 서민물가 안정 2. 서민 부담 경감 및 사회 안전망 강화 3. 일자리 창출 노력</p>	<p><2. 따뜻한 서민경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1)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2)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3) 성장지체 부문의 경쟁력 제고 (4) 취약층 지원 및 중산층 확충 (5)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p>
<p><3. 국제과정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가.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 가계부’)작성 나.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국정과제) 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 정의 확립(국정과제) 라. 건전 재정기조 정착(국정과제) 마.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 재산 관리 효율화(국정</p>	<p><3분야: 지속성장 기반 공고화> 1. 경제체질 선진화 2. 책임 있는 글로벌 일류경제 도약 3. 미래 성장 기반 공공화</p>	<p><3. 지속가능한 선진경제: 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1) 내수 기반강화 (2)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3)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체계 개편 (4) 선제적 미래대비</p>

과제)		
		<p><4. 글로벌 일류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p> <p>(1)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제고</p> <p>(2) 대외 경제협력 강화</p> <p>(3) 사회적 자본확충과 국격 제고</p>
<p>부처간 협업과제</p> <p>1.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및 점검</p> <p>2. 세입·세출 구조조정</p> <p>3. 유통구조 개선</p> <p>4. 경제발전 경험 공유</p>		

〈표2〉 일자리 창출

- 음영처리한 부분은 (2013년)과 (2012년, 2011년)이 서로 다른 부분임.

2013년	2012년	2011년
<p>가. 경제활력회복</p> <p>①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추경 등)</p> <p>②투자·일자리 창출등 내수 활성화 (민간합동TF구성,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강화, 창업활성 화 및 자영업자 경쟁력 제 고)</p> <p>③창조경제 기반조성 (범경제 창조경제 TF구성, 예산·세제·금융지원 강화)</p>	<p>1분야-1-(2):내수활성화 (3): 투자활성화 (민간·지자체 투자유인 개선, 기업규제완화, 녹색산업 제 도개선, 투자여건 개선, 지역 산업활성화)</p> <p>2분야-3:일자리창출노력 (창업지원 강화)</p> <p>3분야-1-(2): 공생발전 (자영업자 지원 효율화) * 2013년 보다 세부적임</p> <p>3분야-1-(2) 공생발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성과공유제, 하도급, 해외동 반진출, 신성장 수출중소기 업프로그램), 지역균형발전유 도)</p> <p>3분야-3-(1): 녹색성장 공고 화 (투자강화, 신재생에너지 보 급, 해외진출(녹색ODA 비중 확대))</p> <p>3분야-3-(2)신성장동력기반 확충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지원 강화, R&D 예산 및 세액공 제 확대)</p>	<p>2-(1): 일자리 창출 기반강화 (고용촉진형 제도 개선, 복수 노조설립허용, 불합리한 차 별시정, 외국인력제도 개선)</p> <p>2-(3): 성장지체부문 경쟁력 (자영업 경쟁력 제고, 지역경 제활성화)</p> <p>3-(1): 내수기반 강화 (창업투자활성화)</p> <p>3-(2):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 력 확충 (녹색성장, 신성장동력확충 (R&D 세액공제), 과학기술혁 신)</p> <p>2-(2): 동반성장 (하도급 보호, 공정거래 감 시, 중소기업경쟁력 제고(근 로생활 질, 벤처투자 촉진))</p> <p>3-1-(3):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체제 개편 (교육경쟁력제고, 직업훈련효 율화, 마이스터고 등 기능인 력 양성)</p> <p>1-(2): 경제체질 개선(기업) (한계기업 구조조정, 도산절 차 효율성제고)</p> <p>1-(2): 경제체질 개선(금융) (부동산 PF 대출 등에 적극 대응, 저축은행 구조조정)</p>

		2-(5): 국민생활 안전제고 (산업재해 및 재난방자, 불법 사금융피해구제, 피해예방(다 단계, 전자상거래))
<p>나.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국정과제)</p> <p>①제도적 기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p> <p>② Master Plan (장단기 계획마련)</p> <p>③ 협업을 통한 정책패키지 시행</p> <p>④ 서비스 산업 허브화 (송도를 허브로 개발)</p>	<p>3분야-1-(1)서비스산업선진 화 (제도적 기반구축) (서비스수지 개선) (의료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추진 정책과제 마무리)</p>	<p>3-(1) 내수기반 강화-서비스 산업선진화 (고부가가치업종 중심으로 개편, 관광의료육성, 컨설팅 사업서비스 경쟁력 제고, 융합산업 활성화, 서비스 산 업 전문연구조직 육성)</p>
<p>다. 고용친화적 재정운용</p> <p>①일자리 중심의 재정운용</p> <p>②고용기반 확충(사회안정망 확충)</p>	<p>2분야-3:일자리창출노력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p> <p>3분야-1-(2)취약부문과 공생 발전 지원 (공생발전선도) (저소득 빈곤층 지원)</p>	<p>2-(4): 취약계층 지원 및 중 산층 확충 (사회안전망 보완(복지행정인 력, 부처간 복지사업간 조 정))</p>

〈표3〉 민생 및 경제안정

2013년	2012년	2011년
<p>가.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국정과제)</p> <p>① 유통구조</p> <p>② 석유·통신의 경쟁촉진</p> <p>③ 공공요금 원가검증시스템 구축</p> <p>④ 가격정보 공개 공개범위 확대</p>	<p>2분야-1. 서민물가안정 (생활물가안정, 공공요금 안정 유도,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옥외가격표시제 도입 등 가격정보 접근성제고)</p> <p>1분야-2. 원자재 가격 충격 완화 (모니터링강화, 부문별 대응, 개발역량 확충)</p>	<p>1-(3):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 (농산물가격안정, 가격정보공개, 시장감시 강화, 대학등록금 등 서비스 요금 안정화, 보금자리주택 등 부동산시장 안정)</p>
<p>나. 가계부채 경감</p> <p>① 가계부채 부담완화 (국민행복기금 설립)</p> <p>② 주거비 지원 강화</p> <p>③ 생계비부담 완화 (4대 중증질환)</p>	<p>1분야-1-(2)-나.가계·기업·금융부문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p> <p>2분야-2 서민부담경감 및 사회안정망 강화 (서민부담 경감, 복지지원효율화, 사회안정망 개선)</p>	<p>1-(2): 경제체질 개선(가계부문) (가계부채의 총량관리강화와 대출구조 개선)</p> <p>2-(4): 취약계층 지원 및 중산층 확충 (주거·의료·보육·금융비용 경감노력, 사회안전망 보장, 취약계층 보호(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신용회복등 재지원)</p> <p>4-(3): 사회적 자본확충과 국격제고</p> <p>(나눔문화 정착(기부금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인증확대))</p>
<p>다. 대외위험요인에 적극대응 (국정과제)</p> <p>① 자본유출입 변동성 모니터링</p> <p>② 외채·외화유동성 적정수준유지</p> <p>③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추진</p>	<p>1분야-1-(2)-다. 외환부문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개선,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외채구조 선진화, 외환시장 중장기 구조 개선(원화의 국제화))</p>	<p>1-(2): 경제체질개선: 외환부문</p> <p>(자본 변동성 완화, 선물환포지션 제도점검)</p>

<p>라.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국정과제)</p> <p>① FTA 네트워크 ② 신흥국 경제협력 ③ G20 정상회의 준비 ④ 국제금융기구 공조강화 ⑤ 기후변화: 녹색기후기금 ⑥ EDCF 확대 발전 ⑦ 경제발전경험공유</p>	<p>2분야. 책임있는 글로벌 일류경제로의 도약: 3분야-3-(2) 신성장동력기반확충</p> <p>(유사함. 그러나 2013년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DDA, 녹색성장 관련 협상, ODA)</p>	<p>4-(1):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 제고, 4-(2) 대외협력강화 (G20, FTA 통상네트워크 확충, ODA 개발협력, 개도국 경험 공유, 역내금융협력)</p>
<p>마. 공공기관 책임경영강화(국정과제)</p> <p>① 재무건전성 관리강화 ② 경영평가 ③ 인사제도</p>	<p>3분야-1-(3) 공공기관 선진화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자율권 확대 통한 책임경영 강화)</p>	

〈표4〉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2013년	2012년	2011년
<p>가.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 (국정과제 재정지원, 재원소요(5년간 세입확충: 53조, 세출구조조정: 82조))</p>		
<p>나.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국정과제) ① 세법개정통해 2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 (일몰조항, 조세지출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② 금융소득과세(파생상품과세 추진, 배당소득 과세전환) * 2013년에 보다 구체화됨. ③ 중장기 세입확충방안 마련</p>	<p>1분야-1-(2) 가. 재정부문 (제정수입확대: 일몰조항 통한 비과세감면 정비, 복권재정기여 강화) 1분야-1-(2) 나. 가계기업부문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마련)</p>	
<p>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국정과제) ① 지하경제 양성화 (FIU, 해외신용카드 사용정보, 역외탈세 방지대책 수립) ② 지하경제 과세강화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③ 성실납세문화 조성 ④ 조세지원체계 개편 (고소득자에서 서민중심으로)</p>	<p>1분야-1-(2) 가. 재정부문 (제정수입확대: 면세유 관리 시스템 구축)</p>	<p>4-(3) 사회적 자본확충과 국격제고 (금융거래 및 세원투명성으로 탈세유인 차단(차명거래, 역외탈세 방지,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제고))</p>
<p>라. 건전재정기조 정착 (국정과제) ①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확</p>	<p>1분야-1-(2) 가. 재정부문 (재정위험 관리강화(장기재정 전망수립), 지방재정관리체</p>	<p>3-(4): 선제적 미래 대비 재정건정성 확보(연금 등에</p>

<p>립</p> <p>② 5년간 82조원 세출구조조정 추진</p> <p>③ 재정평가 활성화</p> <p>④ 재정위험 모니터링</p>	<p>계), 재정지출 효율화(성과중심, 감시기능강화))</p>	<p>대한 장기재정전망)</p>
<p>마.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국정과제)</p> <p>① 공공부문 부채 산출(IMF 기준)</p> <p>② 국유재산관리 효율화</p>	<p>3분야-1-(4) 국고·재정관리 선진화</p> <p>(국고채 시장 안정화, 국고금 관리 효율화,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국가계약제도 개선(입찰제도), 재정관리 효율화(국가통합재무제표, 경기조정 재정수지 도입)</p>	<p>1-(2): 경제체질개선: 공공부문</p> <p>(재정총량관리강화, 지방채 발행한도관리, 공공기관 재무 모니터링)</p>